

# 당정,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속도 낸다

### 122개 기관 대상 분류 착수 “산은·기은 등 은행권은 제외”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낼 태세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산은과 기은,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 있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은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는 게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미 황폐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다”면서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실제 민주당 당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 5당대표 오찬 회동

### 매달 회동 정례화 약속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매월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자에 모여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만나기로 했다”며 “각당을 초월하려는 뜻에서 모임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찬 회동을 먼저 제안했던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초청에 응해주신 5당 대표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도 (여야 5당 대표 모임이) 정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를) 정례화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선거법 개정이나 개헌이라든가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법안도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모든 것이 청와대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뤄지고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듣는데, 한 곳으로 집중해서 나라가 돌아갈 수 없다”며 “그래서 개헌을 요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홍영표 민주 원내대표 “여야 함께 국회 대표해 남북정상회담 가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여야가 함께 국회를 대표해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회도 남북관계 진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야권을 향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요구는 확고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개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결과와 관련,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규제에 대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를 견어내야 한다”면서 “지난 7월 여야 5당이 통상외교에 나선 것처럼 국회도 통상문제에 초당적 협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득주도성장은 사람 잡는 정책... 개헌·선거제 개편 동시 추진”

김성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정권이 ‘소득주도성장 뽀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증폭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인가”라며 “‘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중시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상설 협의체가 동과 별도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밝기 비상경제 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사개특위 조속 구성 한국당 협력하라”

### 민주 의원 8명 기자회견 촉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박영선 의원과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백혜련 의원 등 8명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40여일이 돼 가도록 한국당 위원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지급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사개특위 구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기와 태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켜야 한다”며 “한국당 역시 검찰 및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바른미래 정책위의장에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재선의 권은희 의원(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의원과 예산국회, 정기국회를 함께 끌고 가겠다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고, 최고위원 모두의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광주 광산율이 지역구로 19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

으며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쳐 바른미래당으로 옮겨왔다.

바른미래당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